

2020년 국가직 7급 행정학 (2020.9.26.)

• 해설 : 이승철

01 다음 상황과 관련 있는 이론은?

2020 국가7급

- A 보험회사는 보험 가입 대상자의 건강 상태 및 사고 확률에 대한 특수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다.
- A 보험회사는 질병 확률 및 사고 확률이 높은 B를 보험에 가입시켜 회사의 보험재정이 악화되었다.

- ① 카오스 이론                      ② 상황조건적합 이론                      ③ 자원의존 이론                      ④ 대리인 이론

해설

사려는 대리인 이론과 관련된다.

- 정보의 비대칭성 상황
  - 주인 : 보험회사 - 정보 부족(보험 가입 대상자의 건강 상태, 사고 확률 정보를 모름)
  - 대리인 : 보험가입자 - 정보 보유(자신에 대한 건강 상태, 사고 확률 정보를 알고 있음).
- 인간의 기회주의적 속성(이기적 경제인)
  - 보험가입자 B는 보험가입시 자신의 건강등에 대한 정보를 알리지 않음
- 주인의 역선택(불리한 선택)에 따른 대리손실
  - 보험회사가 가입대상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어 보험금 지급 위험이 높은 대상자를 가입시켜 손실을 봄

답 ④

[관련기출] 대부분의 국가에서 사회보험의 강제가입을 원칙으로 하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2007 광주 소방직

- ① 무분별한 경쟁                      ② 적절하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                      ③ 역선택(adverse selection)                      ④ 운영의 효율성

답 ③

02 로위(Lowi)의 정책 유형에 대한 설명 중 분배정책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2020 국가7급

- ㉠ 정책 과정에서 이해당사자들 간의 협상을 통해 비교적 안정적인 연합을 형성한다.
- ㉡ 누진소득세와 같이 이데올로기적인 기반에서 정책결정이 이루어진다.
- ㉢ 로그롤링(log-rolling)이나 포크 배럴(pork barrel)과 같은 정치적 현상이 나타난다.
- ㉣ 집단 사이의 갈등 수준이 상당히 높은 편이며, 개인이나 집단의 행위를 통제하기 위하여 정부의 강제력이 직접적으로 동원된다.

- ① ㉠, ㉡                                      ② ㉠, ㉢                                      ③ ㉡, ㉣                                      ④ ㉢, ㉣

해설

- ㉠ (○) 분배정책 과정의 참여자는 상당히 안정적이며 이들의 상호작용은 낮은 가시성과 높은 협조체제를 특징으로 한다. 소위 철의 삼각관계(iron triangle)라는 것도 이러한 분배정책에서 많이 나타나는 현상이라 할 수 있으며 의회 위원회, 관료, 이익단체간의 안정적인 관계로 인하여 분배정책은 급격한 변화가 힘들며 점진적인 변화가 대부분인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 ㉡ (×) 재분배정책의 특징이다. 재분배정책은 '가진 자'로부터 '못 가진 자'에게로 부(富)를 이전하는 영합(zero-sum) 게임으로서 시장원리가 아닌 정부정책에 의해서 조정·통제되므로 계급대립적 성격이 강하며, 정책과정 전반에서 강력한 이해대립과 사회계급·복지혜택·평등·정의·국가 역할 등에 관한 이념논쟁(이데올로기적 대립)을 야기한다.
- ㉢ (○) 분배정책에서는 수혜자집단들이 서비스와 편익을 더 많이 배분 받으려는 나눠먹기식정치·돼지구유통정치(pork barrel politics)가 나타나거나, 승자와 패자간 정면대결의 필요성이 없으므로 서로 로그롤링(log-rolling; 담합), 투표의 거래(vote trading)가 이루어짐.
  - 포크배럴(Pork Barrel Politics; 돼지구유통 정치, 나눠먹기식 정치) : 연방의회의원이 출신지역 주민의 환심을 사기 위해 정부로 하여금 지출하게 하는 지역개발 정부보조금 의안과 관련된 용어. 정치인·국회의원들이 정치적 생색을 내기 위해 자기 지역구나 특정 지역 주민의 환심을 사려는 교랑건설, 고속도로, 부두, 댐 등과 같은 지역개발사업에 정부예산을 끌어오는 이기적인 행위를 지칭하며 지역구의 선심사업을 위해 정부의 예산 남용 초래. 특정 배분정책에 관련된 자들이 그 혜택을 서로 나눠가지려 노력하는 현상을 지칭하기도 함.
  - Log-rolling(담합·통나무굴리기), Vote Trading(투표의 교환·거래·매수)
    - ㉠ 이권(利權)이 걸린 몇 개의 법안을 관련 의원들이 서로 협력하여 통과시키는 행태를 뜻하는 미국 의회용어. 통나무를 운반할 때 서로 협력하여 굴리는 데서 유래. 담합에 의해 자신의 선호와는 무관한 대안에 투표하는 집단적 의사결정행태가 이루어지는데, 의원들이 의회에서 안건을 처리할 때 선호의 강도에 차이가 있을 경우 나타나며, 자신이 선호하는 이슈에 대한 지지를 얻는 조건으로 자신은 선호하지 않지만, 타인이 선호하는 이슈를 지지해주는 거래를 하는 것.
    - ㉡ 정책과정에서는 이해당사자들이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협력하며 보통 특정 이익에 대한 수혜를 대가로 상대방이 원하는 정책에 동의해주는 방식으로 이뤄짐. 분배정책 결정 및 집행에서 구유통정치 같은 다툼이 있는 데도 참여자 간 정면대결보다 갈라먹기식의 결정이 이뤄짐. (예) 농민들이 농산물 가격보조 확대 정책을 얻는 대가로 실업자들의 실업보험금 증대정책에 동의해 주는 경우
- ㉣ (×) 규제정책의 특징이다. 규제정책은 규제대상집단(비용부담집단)의 정치적 반발이 심하고, 이들의 저항을 극복하기 위해 정책집행시 규제에 따르지 않는 자에 대한 공권력(강제력)을 행사하며 국민의 자유나 권리를 제한하므로 국회 의결을 거친 법률에 근거를 두어야 한다(규제법정주의).

답 ②

[관련기출] 분배정책과 재분배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15 사회복지9급

㉠ 분배정책에서는 로그롤링(log rolling)이나 포크베릴(pork barrel)과 같은 정치적 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 분배정책은 사회계층적인 접근을 기반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규제정책보다 갈등이 더 가시적이다.  
 ㉢ 누진소득세, 임대주택건설사업 등은 재분배정책이다.  
 ㉣ 재분배정책에서는 자원배분에 있어서 이해당사자들 간의 연합이 분배정책에 비하여 안정적으로 이루어진다.

① ㉠, ㉡                      ② ㉠, ㉢                      ③ ㉡, ㉣                      ④ ㉡, ㉣

답 ②

03 정책의제설정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20 국가7급

- ① 내부접근형(inside access model)에서 정부기관 내부의 집단 혹은 정책결정자와 빈번히 접촉하는 집단은 공중의제화하는 것을 꺼린다.
- ② 동원형(mobilization model)에서는 주로 정부 내 최고 통치자나 고위정책결정자가 주도적으로 정부의제를 만든다.
- ③ 외부주도형(outside initiative model) 정책의제 설정은 다원화된 정치체제에서 많이 나타난다.
- ④ 공고화형(consolidation model)은 대중의 지지가 낮은 정책 문제에 대한 정부의 주도적 해결을 설명한다.

**해설**

④ (×) P. J. May의 의제설정모형 중 공고화형(굳히기형 : consolidation model)은 대중의 지지[관여]가 **높은** 정책 문제에 대한 정부의 주도적 해결을 설명한다.

■ P. J. May의 의제설정모형 - 논쟁의 주도자가 누구인지와, 대중적 지지의 정도에 따라 구분

		대중의 관여 정도(nature of public involvement)	
		높음	낮음
논쟁의 주도자 (initiator of debate)	사회적 행위자들 (민간)	<b>외부주도형(Outside Initiation)</b> • 자유민주주의 국가 : 시민집단이 주도 • 민간집단에서 이슈가 제안되고 확산되어 먼저 공중의제가 되고 대중의 지지를 바탕으로 정부로 하여금 정부의제로 채택하게 함(A. Hirschman의 pressed issue에 해당).	<b>내부주도형(Inside Initiation)</b> • 관료적 권위주의 국가 : 상당한 전문지식과 이해관계가 있는 전문가집단 또는 정부집단이 주도 • 정책결정에 특별한 접근권이 있는 영향력을 가진 집단이 정책을 제안하지만 공개적인 논의 확대나 정책 경쟁을 바라지 않음
	정부 (state)	<b>굳히기형[공고화형](State Consolidation)</b> • 국가유형과 관계없음. 정책결정자가 주도 • 민간집단의 광범위한 지지가 형성된 이슈에 대해 정책결정자가 지지의 공고화를 시도해 정부의제와 공중의제로 동시에 설정됨.	<b>동원형(Mobilization)</b> • 일당제 국가 : 정책결정자가 주도 • 대중적 지지가 낮을 때 국가가 주도하여 정부의제화 후 행정PR이나 상징 등을 활용하여 대중적 지지를 높여 공중의제화.

답 ④

[관련기출] 정책의제설정모형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2016 군무원

- ① 동원형은 이익집단과 국가가 주도하여 정책의제를 채택한다.
- ② 내부접근형은 동원형에 비해 낮은 지위의 고위관료가 주도한다.
- ③ 굳히기형은 대중의 지지가 높은 정책문제에 대하여 정부가 그 과정을 주도하여 해결을 시도한다.
- ④ 허쉬먼(A. Hirschman)은 외부주도형의 정책의제를 강요된 정책문제(pressed issue)로 보았다.

답 ①

[관련기출] 정책의제설정과정 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016 경찰간부

- ① 외부주도모형 : 민간집단에 의해 이슈가 제기되어 공중의제화한 이후 정책 결정자의 관심을 끌게 되면 정부의제로 전환된다.
- ② 동원모형 : 정책결정자가 주도하여 정책의제를 미리 결정한 후 이것을 일반대중에게 이해, 설득하는 활동을 한다.
- ③ 내부접근형 : 최고 통치자나 고위정책결정자에 의해 정부의제가 채택되고, 정책집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공중의제화를 시도한다.
- ④ 굳히기형 : 대중의 지지가 높은 정책문제에 대하여 정부가 그 과정을 주도하여 해결을 시도한다.

답 ③

04 조직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20 국가7급

- ① 전략적 선택론은 조직 설계의 문제를 단순히 상황적응의 차원이 아니라 설계자의 자유재량에 의한 의사결정 산물로 파악한다.
- ② 번스(Burns)와 스토키(Stalker)는 조직을 둘러싼 환경의 성격 및 특성이 조직구조와 어떻게 관련되는지를 설명한다.
- ③ 조직군 생태학은 조직을 외부환경의 선택에 영향을 받을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능동적인 존재로 이해한다.
- ④ 버나드(Barnard)는 조직 내 인간적·사회적 측면을 강조한다.

해설

- ① (○) 전략적 선택론에 따르면 구조적 상황이론에서 조직구조의 결정요인으로 간주하는 환경·기술·규모 등의 상황요인을 지배집단의 전략적 선택을 제약하는 제약요인에 불과하다고 보고, 조직구조를 결정하는 요인은 지배집단들의 이해관계와 권력이라고 본다. 환경과 조직활동 간 조정을 담당하는 관리자는 그의 환경을 조직에게 유리하도록 조정·통제할 수 있는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 환경을 스스로 창조할 수 있다고 본다. 관리자는 본인의 인지적 기초와 가치관을 바탕으로 환경을 인식·지각하며, 이렇게 인식된 환경을 기초로 전략적 선택을 한다고 본다. 조직의 구조와 특성은 관리자의 전략적 선택에 의해 결정된다고 본다.
- ② (○) 번스(Burns)와 스토크(Stalker)는 상황이론과 관련되며 조직을 둘러싼 환경의 성격 및 특성에 따라 적합한 조직구조가 다르다고 보았다. 즉, 동태적 환경에는 유기적 구조(신축성·쇄신)가 효과적이고, 안정적 환경에는 기계적 구조(높은 공식성·높은 복잡성)가 효과적이라고 보았다.
- ③ (×) 조직군 생태학이론은 조직환경의 절대성을 강조하는 극단적 환경결정론 시각이다. 조직변동이 외부환경의 선택에 의해 좌우된다고 보며 조직이 환경에 적극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능동적 역할을 인정하지 않는다.
- ④ (○) 버나드는 조직을 인간들의 의식적 협동체계로 보았다. 조직이 추구하는 목표가 조직구성원 전체나 고객에 대한 봉사이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관리자의 기능은 통제 및 지시권을 가지고 조직 내 의사소통망을 설계하고 유지하는 것이며, 조직구성원들에게 조직의 목표달성에 필요한 서비스를 얻어내는 대신 사기에 필요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고 보았다. 조직목표의 구체화는 일반적이어서는 안 되며 최고관리층으로부터 말단직원에 이르기까지 상호작용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았다. 베버(M. Weber)의 조직관이 기계적 체계, 생산 중심, 경직성을 띤 권위적 조직관인 반면, 버나드는 유기적 체계, 고용자 중심, 환경에 적응하고 대응성이 높은 민주적 조직관이었다.

답 ③

[관련기출] 거시조직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17 국가7급(인사·조직론)

- ① 자원의존이론은 조직의 대외적 전략으로 합병, 적응적 흡수 등을 제시한다.
- ② 구조적 상황이론에서는 조직 설계의 최선의 방법은 조직이 관계해야 하는 환경의 특성에 달려 있다고 주장한다.
- ③ 조직군 생태학 이론은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조직들의 공동적인 노력을 강조한다.
- ④ 전략적 선택이론은 조직의 구조를 설계하는 데 의사결정자의 역할을 강조한다.

답 ③

[관련기출] 거시조직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16 국가7급(인사·조직론)

- ① 거래비용이론은 거래비용이 높아지면 기업 내 위계조직 설립이 줄어들다고 설명한다.
- ② 조직군 생태학 이론은 사회생태학에 근거하여 유리한 환경을 형성하려는 조직의 적극적 노력에 초점을 둔다.
- ③ 구조적 상황이론은 자원을 획득하고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조직 생존의 핵심요인으로 파악한다.
- ④ 전략적 선택이론, 자원의존이론, 공동체 생태학 이론은 임의론적 관점을 채택하고 있다.

답 ④

05 직무분석과 직무평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20 국가7급

- ① 직무분석은 직무들의 상대적인 가치를 체계적으로 분류하여 등급화하는 것이다.
- ② 직무자료 수집방법에는 관찰, 면접, 설문지, 일지기록법 등이 활용된다.
- ③ 일반적으로 직무평가 이후에 직무 분류를 위한 직무분석이 이루어진다.
- ④ 직무평가 방법으로 서열법, 요소비교법 등 비계량적 방법과 점수법, 분류법 등 계량적 방법을 사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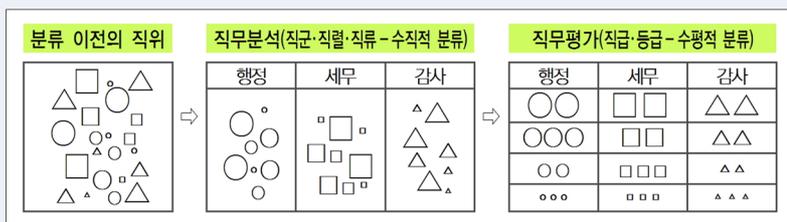
해설

- ① (×) 직무분석 ⇨ 직무평가

■ 직무분석과 직무평가

구 분	기 준	결정내용	분류구조	분업체계	기초자료	목 적
직무분석	직무의 종류와 성질	직군·직렬·직류별	수직적·종적 분류	수평적 분업 체계 형성 (일의 종류별 전문화)	직무기술서에 기초	직무중심의 객관화·과학화·합리화
직무평가	직무의 책임도·곤란도	등급·직급별	수평적·횡적 분류	수직적 분업 체계 형성 (상·하 계층제 형성)	직무분석 자료에 기초	보수의 공정성·합리화 (직무급)

- ② (○) 직무분석을 하기 전에 직무조사를 통해 직무기술서를 작성한다. 질문지법, 면접법, 관찰법 등에 의하여 분류될 직위의 직무에 대한 객관적 정보를 수집·기록한다. 직무의 내용, 책임도, 곤란성, 자격요건 등에 관한 모든 자료를 수집하며, 일반적으로 질문지(설문지)법을 기본으로 하되, 자료가 불충분·부정확한 경우 한정적으로 면접법·관찰법을 실시한다
- ③ (×) 직무분석 이후 직무평가가 이뤄진다.



- ④ (×) 분류법, 서열법이 비계량적 방법, 점수법, 요소비교법이 계량적 방법.



07 신제도주의 유형과 그 특징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2020 국가직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	역사적 제도주의	사회학적 제도주의
①	중범위 수준 제도분석	제도동형성	경로의존성
②	거래비용	경로의존성	제도동형성
③	전략적 상호작용	중범위 수준 제도분석	거래비용
④	경로의존성	전략적 상호작용	중범위 수준 제도분석

해설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	거래비용	제도가 없는 상태를 만인에 의한 만인의 투쟁상태(사회적 딜레마 상태)로 가정하고, 사회적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 평등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공동체의 구성원들의 자발적 합의를 통해 제도가 형성된다. 제도는 불확실성과 거래비용을 감소시켜 거래의 안정성과 교환의 효율성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전략적 상호작용	인간이 의도적으로 제도를 형성하지만 일단 형성된 제도는 합리적 행위자의 이기적 행태에 제약을 가한다. 제도는 행위자들 간의 상호작용을 구조화시켜 개인이나 조직의 선호와 유인구조에 영향을 미친다. 행위자는 일반적으로 자신의 고정된 선호나 기호(嗜好)의 집합을 지니며, 개인은 이러한 선호의 성취를 극대화(효용극대화)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전략적·계산적인 행동을 취한다. 행위자의 행태는 비개인적·역사적 힘이 아니라, 전략적 계산에 의해 이끌린다. 제도를 유지하는 것보다 제도를 변화시키는 데 소요되는 비용이 더 클 경우 제도는 균형상태에 놓이게 된다.
사회학적 제도주의	제도동형성	동형화는 서로 동일한(상이한×) 조직환경이나 장에서 한 조직단위가 성공한 다른 조직단위를 닮아가는 제약적인 과정. 처음에 다른 형태로 출발한 제도라도 국가나 조직의 경계를 넘어 점차 유사한 형태로 수렴하는데 이를 제도적 동형화라 함. 이는 효율성·경쟁·합리성을 추구하기 위함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정당(적절)하다고 인정받는 구조와 기능을 닮아가는 과정의 결과.
역사적 제도주의	경로의존성	경로의존성은 제도를 문화의 산물로 보는 사회학적 신제도주의에서도 제시하지만 역사적 신제도주의에서 비롯되었다. 역사적 신제도주의는 제도는 지속성을 가지며, 그 결과 한 국가제도의 역사발전은 일정한 경로를 가지며, 새로운 투입이 발생해도 그 경로를 벗어나지 못하고 과거와 유사한 선택을 하는 '경로의존성'이 나타난다고 보았다. 따라서 제도가 개인이나 정책에 미치는 영향뿐만 아니라 제도가 만들어지고 진화하여 온 경로와 맥락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는다.
	중범위 수준 제도분석	현상에 대한 이해는 그 자체로서 이해되어야 한다는 전체주의적 입장이지만, 분석수준은 중범위 수준이다. 관심을 두는 제도적 변수는 계급구조와 같은 거시적 변수나 개인의 선호체계와 같은 미시적 변수가 아닌 중범위적 제도변수로서 자본가단체나 노동조합 같은 경제적 이익집단의 조직형태, 정당체계 등이다.

답 ②

신제도주의 유파 간 비교

1. 유사점

- ① 사회현상의 설명에서 사회의 구조화된 일정측면을 의미하는 제도에 초점.
- ② 제도는 개인행위를 제약하며 제도적 맥락에서 이루어지는 개인행위는 규칙성을 지니므로, 원자화되거나 과소 사회화된 개인이 아닌 제도라는 맥락 속에서 이루어지는 개인행위에 초점.
- ③ 제도가 개인행위를 제약하지만 개인 간 상호작용의 결과 제도가 변할 수도 있으므로, 제도는 독립변수성과 종속변수성을 지님.
- ④ 제도는 공식적 규칙과 법률 등 공식적인 측면과 규범과 관습 등 비공식적 측면을 지님.
- ⑤ 제도는 안정성을 지니므로, 일단 형성된 제도는 그때그때의 상황과 목적에 따라 쉽게 변하는 것은 아님.

■ 기타 특징(오석홍)

- ① 조직과 종단적(역사적 관점)·횡단적(사회학적 관점)으로 연결된 제도를 사이의 영향관계를 전체적으로 파악하므로 집합주의적 접근방법
- ② 제도를 문화의 산물이며 경로의존성을 지닌 현상으로 파악하기 때문에 문화론적 접근방법

2. 차이점

구 분	합리적 선택 신제도주의	사회학적 신제도주의	역사적 신제도주의
제도의 개념	개인의 합리적 계산, 전략적 행위	사회문화 및 상징, 의미구조	역사적 맥락과 경로의존성·지속성
	좁게 인식(미시적 : 개인 간 거래행위)	가장 넓게 인식(거시적 : 사회문화)	넓게 인식(거시적 : 국가·정치체제 = 제도)
제도의 측면	공식적 측면 더 중시	비공식적 측면 더 중시	공식적 측면 더 중시
학문적 기초	경제학	사회학	정치학
초 점	개인 중심(개인의 자율성)	사회 중심(문화의 자율성)	국가 중심(국가의 자율성)
개인의 선호	외생적·선형적(주어진 것), 고정 ※ 개인의 고정된 선호가 전체선호를 결정	내생적(주어진 것이 아님, 형성되는 것)	
		※ 사회문화 및 상징이 개인선호를 결정	※ 집단 선호를 결정하는 정치체제가 개인선호를 재형성
인간 행동	임의론과 제도적 결정론 절충	제도적 결정론 성격(선호가 제도의 영향을 받음)	
제도의 형성	전략적 행위, 균형	인지적 측면	역사적 과정, 경로의존성
	합리성, 효율성, 결과성	사회적 정당성, 수용성, 적절성	정치체제의 자율성, 권력불균형 반영
제도의 변화 원인	전략적 선택, 비용·편익비교, 결과성(consequentiality) 논리	동형화(isomorphism), 인지·상징흡수 적절성(appropriateness)의 논리	결절된[단절적] 균형, 외부적 충격 역사적 우연성
제도의 역할	거래의 안정성 제공, 거래비용 최소화	인간행동을 구조화, 안정화	국가의 정책 및 정책결과에 영향
방법론	연역적 연구(일반화된 이론 추구)	귀납적·경험적 연구(형이상학적 신비주의, 해석학, 민속학, 현상학)	귀납적 연구(사례연구, 비교연구)
분석 단위	개인(미시적, 방법론적 개체주의)	제도(거시적, 방법론적 전체주의)	

08 정책집행의 접근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20 국가7급

- ① 하향식 접근방법에서는 정책목표의 신축적 조정이 효과적인 정책집행을 가져온다고 하였다.
- ② 사바티어(Sabatier)와 매즈매니언(Mazmanian)은 상향식 접근 방법의 대표적인 모형을 제시하였다.
- ③ 엘모어(Elmore)가 제안한 전방향적 연구(forward mapping)는 상향식 접근방법과 유사하다.
- ④ 고긴(Goggin)은 통계적 연구설계의 바탕 위에서 이론의 검증을 시도하는 제3세대 집행 연구를 주장하였다.

해설

- ① (×) 하향식 접근에서는 정책목표의 안정성을 효과적 정책집행의 조건으로 봄
- ② (×) 사바티어와 매즈매니언은 하향적 접근 방법의 모형을 제시(나중에 사바티어는 통합적 접근으로 전환해 정책옹호연합모형 제시)

■ 효과적 정책집행을 위한 이상적 조건(하향적 접근) - 사바티어(P. Sabatier)와 매즈매니언(D. Mazmanian)

- ㉠ 정책결정의 내용은 타당한 인과이론에 바탕을 둔 것일 것.
- ㉡ 정책내용으로서 법령은 명확한 정책지침을 지니며, 대상집단의 순응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구성될 것(법적 구조화).
- ㉢ 유능하고 헌신적인 집행관료가 정책집행을 담당할 것.
- ㉣ 결정된 정책에 대해 조직화된 이익집단, 유권자, 입법가, 행정부의 장으로부터 지속적 지지를 받을 것
- ㉤ 정책목표는 안정적이며, 집행과정 동안 법령에 규정된 목표의 우선순위가 변하지 않아야 하며, 상충되는 정책이나 사회경제적 상황의 변화에 의해 기존의 정책이 현저하게 달라지지 않을 것

- ③ (×) 후방향적 연구가 상향식 접근방법과 유사

구분	하향적 집행(Top-down Approach)	상향적 집행(Bottom-up Approach)
Elmore	전방향적 집행(forward mapping)	후방향적 집행(backward mapping)
Berman	정형적 집행(programmed implementation)	적응적 집행(adaptive implementation)

- ④ (○)

■ 정책집행 연구의 변화

1세대 집행연구 (1970년대 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단일 정책 집행 사례 중심 연구(주로 정책집행 실패 사례), 정책집행의 이슈를 학자공동체 뿐 아니라 일반국민들에게 확산시킴</li> <li>② Pressman과 Wildavsky의 「집행론」(1973) : 정책실패사례 분석을 통해 집행론 연구를 촉발, 집행과정에서 정책위위체제(주정부, 지방정부, 이익집단 등)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러한 하위체제 때문에 연방정부가 집행과정을 제대로 통제·조정할 수 없다고 봄.</li> </ul>
2세대 집행연구 (1970년대 중반 ~ 1980년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하향적 접근법과 상향적 접근법 간 논쟁, 양 접근법의 통합적 접근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터와 호른(Van Meter &amp; Van Horn), 나가무라와 스몰우드(Nakamura &amp; Smallwood), 매즈매니언과 사바티어(Mazmanian &amp; Sabatier), 립스키(Lipsky), 엘모어(Elmore), 버먼(Berman), 히언과 헐(Hjern &amp; Hull)</li> <li>㉡ 1970년대 중반부터 하향적 접근과 상향적 접근의 연구가 이분법적으로 전개</li> <li>㉢ 1980년대 중반 이후 하향적 접근과 상향적 접근의 통합을 시도.</li> </ul> </li> <li>② 정책집행의 성공 사례 분석을 통하여 좀 더 긍정적인 차원에서 정책집행의 성공요인을 분석</li> </ul>
3세대 집행연구 (1980년대 후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오톨(O'toole), 고긴(Goggin), 보먼(Bowman).</li> <li>② 집행관 : 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의 인과적 복잡성, 집행의 동태성·역동성(시간이 지남에 따라 연방·주·지방정부 등 정부 수준에 따라 집행 과정과 결과는 달라짐), 집행결과와 다양성(집행주체인 정부 수준에 따라 집행결과도 상이하게 나타남)</li> <li>③ 과학적 방법론 강조 : 변수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의, 변수의 인과적 관계 구축, 경험적 측정을 위한 변수의 조직화와 집행모형 개발, 인과모형에서 도출된 가설들의 경험적 검증, 연구과정에서 측정과 방법론상의 다중성.</li> </ul>

답 ④

09 학습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20 국가7급

- ① 개방체제와 자아실현적 인간관을 바탕으로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고자 한다.
- ② 연결된 체계 간의 상호작용을 이해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체계적 사고(systems thinking)를 강조한다.
- ③ 조직구성원들의 비전 공유를 중시한다.
- ④ 조직구성원의 합이 조직이 된다는 점에서, 조직 내 구성원 각자의 개인적 학습을 강조한다.

해설

- ④ (×) 구성원 간 진정한 대화와 집단적 사고의 과정을 통해 개인적 능력의 합계를 능가하는 지혜와 능력을 구축하게 하는 것을 강조하므로 개인적 학습보다 사회적 학습을 강조한다.

■ 센게(P. Senge)의 학습조직을 위한 다섯 가지 수련(기반)

- ① 자기완성[전문적 소양](personal mastery) : 개인적인 비전을 지속적으로 명료화하고, 심화시키며, 자신의 비전과 현재상태 사이의 갭을 줄이기 위해 지속적인 학습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업무전반에 걸쳐 전문가적 수준이 되는 것을 말하며 창조적인 긴장이 유지될 때 형성됨.
- ② 사고의 틀[사고모형·세계관](mental model) : 인식과 사고의 내면에 놓여있는 준거의 틀로 개인이 세상 조직에 적응해 가는 방식에 대해 가지는 신념. 성찰기술·탐구기술을 통해 잘못된 인식체계를 개선.
- ③ 공유된 비전(building shared vision) : 조직이 추구하는 방향이 무엇이며, 왜 중요한 것인지에 대해 모든 조직원들이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일체감과 사명에 대한 공감대).
- ④ 집단적 학습[팀 학습](team learning) : 구성원 간 진정한 대화와 집단적 사고의 과정을 통해 개인적 능력의 합계를 능가하는 지혜와 능력을 구축하게 하는 것. 대화와 토론을 통한 지속적 협력적 학습과 팀워크 개발·구축이 필요. 따라서 학습조직은 개인적 학습보다 사회적 학습을 강조.
- ⑤ 시스템적 사고(systems thinking) : 조직 내의 문제 파악 시 전체적인 틀 안에서 하부 구성요소들을 상호 연관시켜 생각하는 것으로 단편적인 사항에 대해 수동적으로 분석하는 접근방법이 아니라 행위 유형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구조적 복잡성을 통찰할 수 있는 사고양식.

답 ④

10 리더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20 국가직

- ① 변혁적(transformational) 리더십의 특성에는 영감적 동기부여, 자유방임, 지적 자극, 개별적 배려 등이 있다.
- ② 진성(authentic) 리더십의 특성은 리더가 정직성, 가치의식, 도덕성을 바탕으로 팔로워들의 믿음을 이끌고, 팔로워들이 리더의 윤리성과 투명성을 믿으며 긍정적 감정을 느낀다는 것이다.
- ③ 서번트(servant) 리더십은 자기 자신보다는 다른 사람에게 초점을 두고, 부하들의 창의성과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봉사하는 리더십이다.
- ④ 거래적(transactional) 리더십은 적극적 보상이나 소극적 보상을 통해 영향력을 행사한다.

해설

① (×) 자유방임 ⇨ 카리스마적 리더십(이상화된 영향력)

■ 배스와 아볼리오(B. Bass & B. Avolio, 1993)의 변혁적 리더십의 구성요소(4I's)

이상화된 영향력 (idealized influence) = 카리스마적 리더십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행동하여 구성원들로 부터 존경과 신뢰 획득. 구성원들은 리더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함. 리더가 난관을 극복하고 현상에 대한 각성(disenchantment)을 확고하게 표명함으로써 부하들에게 자긍심과 신념을 심어줌
영감적 동기부여 (inspirational motivation) 영감적 리더십	부하가 도전적 목표와 임무, 미래에 대한 비전을 열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계속 추구하도록 격려. 안전 같은 낮은 수준의 욕구가 아닌 자아실현·존중감 같은 높은 수준의 욕구를 실현시키는데 관심을 가지며 부하 개인의 이해를 넘어 조직 차원의 큰 목표에 관심을 갖도록 함.
지적 자극 (intellectual stimulation)	부하로 하여금 형식적 관례와 사고를 다시 생각하게 함으로써 새로운 관념을 촉발시킴. 부하들이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태도를 갖도록 자극하며, 문제해결 과정에 참여하도록 함.
개인적 배려 (individual consideration)	부하들을 개인적으로 지도하면서 부하 개개인의 발전 및 성장에 대한 욕구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임. 부하에 대해 개인적으로 존중한다는 것을 전달.

② (○)

■ 진성리더십(Authentic Leadership)

개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리더와 조직구성원들의 긍정적인 자기개발 촉진 측면에서 자기인식, 내재화된 도덕적 관점, 정보의 균형된 프로세스(처리) 및 관계적 투명성 등을 보다 발전시키기 위하여 긍정적 심리 역량과 긍정적/도덕적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증진하는 리더의 행동 양식</li> <li>• 진성리더십은 부하에 대한 적극적 영향과 변화를 강조하는 기존의 리더십 이론과 달리 리더 개인의 신념, 가치 및 긍정적 역량을 중시하며, 조직구성원과의 밀접한 관계의 형성과 긍정적 모델링을 통한 조직구성원의 행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침</li> </ul>	
주요 용어	진정성 (authenticity)	개인이 자기 스스로를 알고, 자신 내면의 생각과 감정, 가치관 등에 일치되도록 행동하는 것 ① 자기인식(self-awareness) : 자신의 진정한 자아를 인식하는 것으로 자신의 재능, 감정, 목표, 핵심 가치관, 믿음, 욕망 등을 지속적으로 이해하는 과정 ② 자기규제(self-regulation) : 가치관과 목표를 자신의 행위와 일치시키는 과정
	진정성 있는 리더 (Authentic Leader)	① 의미 : 자신이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하는지를 충분히 의식하고 있고 자신과 타인의 가치, 도덕적 관점, 지식과 강점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타인이 인식하고 있으며, 그들이 행동하는 맥락을 알고 있고, 자신감 있고, 희망적이며, 낙관적이고, 복원력이 높으며 수준 높은 도덕성을 지닌 사람 ② 특성 : 자신에 대한 진실성, 사적이익보다는 개인적 확신에 의한 동기부여, 타인의 관점이 아닌 자신의 개인적 관점에 의한 리더십 발휘, 개인적 가치와 확신에 바탕을 둔 행동 등 ③ 기능 : 긍정적 역할 모델링(positive role modeling)을 통해 구성원들의 긍정적 조직행태를 내재화시키는 규범적(모범적) 영향을 주며, 구성원들의 긍정적 정서를 확대시키고, 긍정적 자기 개발을 촉진
구성 요인	자기인식 (self-awareness)	리더가 조직구성원들이 리더의 리더십을 어떻게 인식하는가에 더하여 리더 자신의 특성, 가치관, 동기, 감정, 인지 등을 이해하는 것
	도덕성 (ethical/moral)	리더가 동료, 조직, 사회적 압력 등과 같은 외부적 압력에 근거하기 보다는 자신의 내적 도덕기준과 가치관 등에 따라 행동하는 것
	투명성 (transparency)	정보를 공유하고 자신의 부적절한 감정을 나타내는 것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하며, 개방성과 진실성을 기반으로 리더가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정확하고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균형된 프로세스 (balanced processing)	리더가 의사결정을 하기 전에 의사결정 관련 자료들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조직구성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려는 행동을 의미합니다.

답 ①

11 다음 설명을 특징으로 하는 정책분석기법의 기본 원칙이 아닌것은?

2020 국가직

그리스 현인들이 미래를 예견하던 아폴로 신전이 위치한 도시의 이름을 따서 붙여졌다. 1948년 미국 랜드(RAND) 연구소의 연구진에 의해 개발되어 공공부문이나 민간부문의 예측 활동에서 활용된다.

- ① 조건부확률과 교차영향행렬의 적용
- ② 익명성 보장과 반복
- ③ 통제된 환류와 응답의 통계처리
- ④ 전문가 합의

해설

델파이기법의 기본원칙

- ㉠ 격리·익명성 : 익명이 엄격히 보장되어 분리된 개인으로서 답변하고, 의견 제시는 대면적 토의가 아닌 서면으로 제시.
- ㉡ 반복 :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검토하고, 각자 다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면서 의견의 회람을 몇 차례 반복.
- ㉢ 통제된 환류 : 질문서(설문지)에 대한 응답을 종합된 의견으로 전문가와 참여자에게 전달.
- ㉣ 응답의 통계적 처리 : 종합된 의견의 전달은 질문서에 대한 응답을 요약수치(집중정도·확산정도·빈도분석) 형식으로 표현.
- ㉤ 전문가들 간의 합의 : 반복적 설문조사 과정에서 전문가의 의견 조정과 합의가 이루어짐. 델파이기법은 중국적으로 전문가 집단 의견일치를 유도하는 기법.

교차영향분석(cross - impact analysis)

- ㉠ 의의 : 관련 사건의 발생 여부에 따라 미래의 특정 사건의 발생 확률에 대해 식견 있는 판단을 이끌어 내는 주관적 예측방법. 사건 간 상호관련성 식별에 도움을 주며 구조화가 잘 안 된 문제의 복잡한 상호의존성을 분석. 조건확률이론(한 사건의 발생확률이 다른 사건에 종속적)에 기초, 교차영향행렬 사용(어떤 사건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사건을 규명하여 관련사건 간 상호작용이 미치는 잠재적 효과를 행렬로써 분석).
- ㉡ 델파이기법의 보완 : 델파이기법은 개별 사건의 발생가능성에만 관심을 두지만, 교차영향분석은 관련사건 간 잠재적 의존관계를 고려.

답 ①

12 다음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20 국가7급

킹슬리(Kingsley)가 처음 사용한 용어로, 그 사회의 주요 인적 구성에 기반하여 정부관료제를 구성함으로써, 정부관료제 내에 민주적 가치를 주입하려는 의도에서 발달되었다.

- ① 관료들은 누구나 자신의 사회적 배경의 가치나 이익을 정책 과정에 반영시키려고 노력한다는 점을 전제로 한다.
- ② 크랜츠(Kranz)는 이 제도의 개념을 비례대표(proportional representation)로까지 확대하는 것에 반대한다.
- ③ 라이퍼(Riper)는 이 제도의 개념을 확대해 사회적 특성 외에 사회적 가치까지도 포함시키고 있다.
- ④ 현대 인사행정의 기본 원칙인 실적제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역차별을 야기할 수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해설

대표관료제에 대한 내용이다.

- ① (○) 대표관료제의 기본가정은 소극적 대표가 적극적 대표로 연결된다는 것이다(사회적 대표성이 정치적·정책적 대표성을 확보). 관료와 국민사이의 사회경제적 배경의 유사성의 정도와 그들 간 정책태도 또는 정책선택의 유사성의 정도사이에 밀접한 상관관계를 가정한다. 공무원의 행태는 자신과 출신배경을 같이 하는 집단의 가치와 이해에 의해 결정되며, 각 사회집단을 대표하는 공무원들의 상호조정과 타협을 거쳐 사회적 가치와 이익을 대변하는 정책이 산출된다는 것이다.
- ② (×), ③ (○) 대표관료제는 그 사회를 구성하는 모든 주요 집단으로부터 인구비례에 따라 관료를 총원하고 그들을 정부관료제 내의 모든 직무분야와 계급에 비례적으로 배치함으로써, 정부관료제가 그 사회의 모든 계층과 집단에 공평하게 대응 하도록 하는 인사제도를 말한다. 대표관료제는 정부관료제의 인적 구성이 그 사회의 인적 구성을 반영하게끔 정부관료제를 구성함으로써, 정부관료제 내에 민주적 가치를 주입시키려는 의도에서 발달된 개념이다. 대표관료제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하기 시작한 킹슬리(D. Kingsley)는 대표관료제를 사회 내의 지배적인 세력들을 그대로 반영하도록(mirror) 구성된 관료제라고 정의함으로써 대표관료제의 구성적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한편 반 라이퍼(P. P. Van Riper)는 대표관료제의 개념을 확대해 사회적 특성 외에 사회적 가치까지도 대표관료제의 요소로 포함시키고 있으며, 크랜츠(H. Kranz)는 대표관료제의 개념을 비례대표(proportional representation)로까지 확대하여 관료제 내 출신집단별 구성비율이 총인구 구성비율과 일치하고, 관료제 내 모든 직무와 계급의 구성비율도 총인구비율에 상응하게 분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④ (○) 사회적 고려를 하며 잠정적으로 일부 사회집단구성원을 우대함으로써 능력과 업적에 따른 인사관리를 강조하는 실적주의와 충돌될 수 있다. 또한 대표관료제를 엄격하게 적용하면 소수집단 우대정책(Affirmative Action)처럼 실적으로는 할당제를 강요하는 결과를 낳고, 역차별의 문제를 야기한다(수평적 평등 저해). 즉, 더 우수한 능력을 지닌 개인이 종래에 혜택을 받아오던 집단의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신규채용이나 승진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답 ②

13 지방자치법 상 지방의회 의원이 받을 수 있는 징계의 사례가 아닌 것은?

2020 국가7급

- ① A 의원은 45일간 출석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징계를 받았다.
- ② B 의원은 공개회의에서 사과를 하는 징계를 받았다.
- ③ C 의원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에 따라 제명되는 징계를 받았다.
- ④ D 의원은 공개회의에서 경고를 받는 징계를 받았다.

해설

• 지방자치법 제88조(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징계의 종류와 의결)

- ①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1.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2.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4. 제명
- ② 제명에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답 ①

14 지역사회 권력구조에 관한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20 국가7급

- ① 레짐이론은 기업을 비롯한 민간부문 주요 주체들과의 연합이나 연대를 배제하는 특성을 갖는다.
- ② 성장기구론에서 성장연합은 비성장연합에 비해 부동산의 사용가치(use value), 즉 일상적 사용으로부터 오는 편익을 중시한다.
- ③ 지식경제 사회에서 엘리트 계층과 일반 대중 사이의 정보 비대칭성(asymmetry)이 심화되면 엘리트 이론의 설명력은 더 높아진다.
- ④ 신다원론에서는 정책과정이 지역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에게 공정하게 개방되어 있으며, 엘리트 집단의 영향력은 의도적 노력의 결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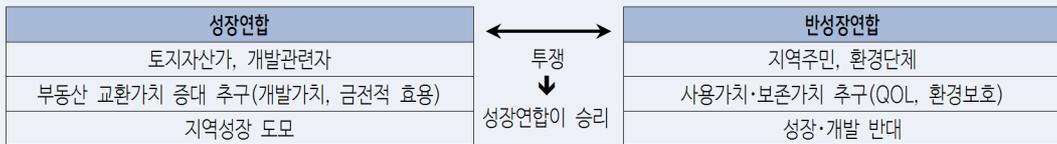
해설

- ① (×) 레짐이론은 도시거버넌스를 다룬 이론으로 정부에 의한 일방적 통치가 아닌 지방정부와 민간의 주요 주체 간 상호의존성과 협력관계를 다루는 이론이다. 한 도시정부가 직면하고 사회적·경제적 도전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부문과 비정부부문 양 세력 간의 상호의존성을 강조하면서 이들 두 부문의 행위자들 간의 협조와 조정문제에 초점을 맞춘다.

성장기구론	정치·행정엘리트 < 사회엘리트 + 경제엘리트
도시레짐이론	정치·행정엘리트 + 사회엘리트 + 경제엘리트

- ② (×) 성장연합은 교환가치 추구, 반성장연합은 사용가치·보존가치 추구

■ 로간과 몰로취 성장기구론(성장연합론)



- ③ (○) 지식경제 사회에서는 정보가 권력의 원천이 된다. 엘리트 계층과 일반 대중 사이의 정보 비대칭성(asymmetry)이 심화되어 정보격차(digital divide, 정보의 빈익빈·부익부)가 확대되면 권력의 기반이 되는 정보가 엘리트 계층에 집중되면서 엘리트의 권력을 강화시켜 권력불균형이 확대되므로 엘리트론의 설명력은 높아진다.

- ④ (×)

다원론	신다원론
정치과정(정책과정)이 모든 집단에게 동일하게 개방 (권력의 분산성·유동성)	정치과정(정책과정)이 모든 집단에게 동일하게 개방되지 않음. 정부도 모든 집단을 동등하게 대우하지 않음
엘리트집단의 영향력은 의도적 노력의 결과(정치자원의 동원과 이익집단 활동을 통해 정부가 자신의 요구를 수용하도록 의도적으로 노력한 결과 파생)	엘리트집단의 영향력은 구조적·체계적 권력(정치체제가 타 집단의 희생을 바탕으로 특정한 이익을 체계적이고 일관적으로 도모할 때, 구조적 편견(system bias)이 존재한다. 그리고 그러한 구조적 편견의 결과 특정집단에 파생되는 권력을 구조적 또는 체계적 권력이라고 한다.

- ① 다원론 : 권력의 분산성과 유동성을 강조하며, 단일 권력엘리트가 모든 정책영역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정책영역별로 상이한 엘리트가 영향력을 행사하는 영향력의 특화 주장. 선출직 공직자는 자율적 존재로서 지역의 의사결정에서 독립적인 영향력 행사하며, 다원론에서는 정치과정의 개방성과 공정성에 대한 믿음을 지니고 있다.

- ② 신다원론 : 정치과정이 모든 집단에게 동일하게 개방되어 있지 않으며, 정부도 모든 집단을 동등하게 대우하지 않음을 주장. 기업집단이 지방정부로부터 우호적인 대우를 받는 특권적 지위를 향유하고 있음을 인정한다. 이는 경제성장과 고용창출을 위해 필요한 자본과 투자결정을 기업이 통제하고 있기 때문이기에 자본주의와 민주주의 제도에서 불가피하다고 지적한다. 또한 집단들에 대한 선출직 공직자의 중립성을 거부하며, 기업집단들의 구조적 권력을 인정하고 있다.

\* 구조적 권력에 대한 논의에 따르면 정책은 구조적 관계 속에서 만들어지며 그러한 관계 속에서 권력이 행사된다. 구조적 관계는 지역공동체 고위공직자들의 선호와 편애의 형태로 공동체내의 다양한 집단들에게 이익과 불이익을 부여한다. 정치행정체제가 이처럼 다른 집단의 희생을 바탕으로 특정한 이익을 체계적이고 일관적으로 도모할 때, 구조적 편견(system bias)이 존재한다. 그리고 그러한 구조적 편견의 결과 특정집단에 파생되는 권력을 구조적 또는 체계적 권력이라고 한다.

- ③ 다원론과 신다원론의 공통점으로는 정치를 집단들간의 경쟁의 장으로, 그리고 정책을 집단들간의 경쟁의 산물로 파악한다는 점이다. 하지만 기업권력에 대해서는 전자가 도구적 해석을 하는 반면에 후자는 구조적 해석을 한다는 점에 차이가 있다. 즉 다원론의 도구적 해석에 따르면, 기업권력은 기업이 정치자원의 동원과 이익집단 활동을 통해 정부가 자신의 요구를 수용하도록 의도적으로 노력한 결과 파생된다는 것이다. 반면에 신다원론의 구조적 해석에 의하면 기업권력은 기업집단이 자본축적을 수행하면서 파생되는 구조적 산물로 파악한다.

답 ③

15 총액인건비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20 국가7급

- ① 정원관리에 대한 각 부처의 자율성 확대를 목표로 한다.
- ② 김대중 정부에서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처음 도입되었으며, 공공기관으로 확대되었다.
- ③ 보수관리에 대한 각 부처의 자율성이 확대되었다.
- ④ 시행기관은 성과중심의 조직운영을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해설

- ①③ (○) 총액인건비제도는 인력과 예산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조직의 성과를 향상하기 위하여 각 시행기관이 당해 연도에 편성된 총액인건비 예산의 범위안에서 기구정원, 보수, 예산의 운영에 관한 자율성을 가지되, 그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는 제도이다.

- ② (×) 노무현 정부에서 2005년부터 시범실시하였고, 2007년부터 전 부처로 전면 확대 실시되었다. 중앙행정기관 및 그 산하의 공공기관도 적용대상이다.

지방자치단체는 2007년부터 총액인건비제를 실시했으나 2014년부터 기준인건비제로 전환되었다.

④ (○) 총액인건비제 시행여부는 부처(시행기관) 자율로 결정하고, 주관부처와 사전협의는 하지 않는다.

주관부처	조직·정원은 행정안전부, 보수는 인사혁신처, 예산은 기획재정부.
시행기관	정부조직법, 기타 법령에 의해 설치된 중앙행정기관 및 책임운영기관(군인·군무원, 독자적인 예산편성 권한이 없는 자문기구 성격의 위원회는 적용 제외).

답 ②

16 전자정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20 국가7급

- ① 온라인 참여포털 국민신문고는 국민의 고충 민원과 제안을 원스톱으로 접수 및 처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②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은 재정업무의 전 과정을 온라인으로 수행하고 재정사업의 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통합재정정보시스템이다.
- ③ 스마트워크(smart work)란 통신, 방송, 인터넷 등을 통합한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안전하게 제공하는 통합네트워크를 말한다.
- ④ 전자정부 2020 기본계획은 전자정부법에 따라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수립되었다.

해설

- ③ (×)
  - 광대역 통합망(BcN : Broadband Convergence Network) : 통신·방송·인터넷이 융합된 품질보장형 광대역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언제 어디서나 끊임없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차세대 통합네트워크.
  - 스마트워크 : 원격근무의 한 형태로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부여받은 업무를 주거나 교통요지에 마련된 장소(스마트워크센터)에서 수행하는 근무형태
- ④ (○) 전자정부기본계획은 「전자정부법」 제5조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계획으로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 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수립한다. '2016년~2020년' 5년 간의 계획이 '전자정부 2020 기본계획'이다. 2020년에는 '2021년~2025년' 5년 간의 전자정부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답 ③

17 니스카넨(Niskanen)의 예산극대화 이론과 던리비(Dunleavy)의 관청형성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20 국가7급

- ① 니스카넨(Niskanen)에 따르면 최적의 서비스 공급 수준은 한계편익(marginal benefit)과 한계비용(marginal cost)이 일치하는 수준에서 결정된다.
- ② 두 이론 모두 관료를 자신의 이익과 효용을 추구하는 인간으로 가정한다.
- ③ 던리비(Dunleavy)에 따르면 관청형성의 전략 중 하나는 내부 조직 개편을 통해 정책결정 기능과 수준을 강화하되 일상적이고 번잡스러운 업무는 분리하고 이전하는 것이다.
- ④ 니스카넨(Niskanen)에 따르면 예산극대화 행동은 예산유형과 직위의 관계, 기관유형, 시대적 상황 등의 측면에서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해설

- ④ (×) 던리비가 니스카넨의 예산극대화모형을 비판한 내용이다. 니스카넨(Niskanen)의 예산극대화 이론을 비판한 P. Dunleavy의 관청형성모형에서는 관료들이 공적 결정을 사적 이익을 극대화한다는 가정은 수용하나, 관료가 자기 부처의 예산을 극대화한다는 데에는 문제가 있다고 보았다. 즉, 모든 기관, 모든 관료가 모든 예산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 종류(핵심예산, 관청예산 등), 관료 위치(고위직, 하위직) 등에 따라 다양한 이기적 행태가 나타난다고 주장하였다.

답 ④

**니스카넨(W. Niskanen)의 관료이익(예산)극대화 가설(budget maximization)**

- ① **효용극대화** : 관료는 공공재를 산출하여 공급, 정치인(의회 의원)은 구매자. 정치인과 관료는 목적함수가 다르므로 효용극대화의 내용과 다름.
  - ① **정치인** : 재산(특히 극대화)을 목표로 사회효용[사회후생]을 극대화하려 하므로 순편익(=총편익 - 총비용)의 극대화 수준(한계편익=한계비용)인  $Q_0$ 의 공공서비스를 공급하려 함
    - 정치적 최적수준(political optimum)
  - ② **관료** : 정치가들과 달리 자기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비용보다 편익에 더 관심을 두므로 총편익과 총비용이 일치하는 지점, 즉 순편익=0이 되는  $Q_1$ 까지 생산을 늘리려 함
    - 관료적 최적수준(bureaucratic optimum)
- ※ 관료의 예산극대화가 가능한 이유 : 관료 업무 성과의 계량적 측정 곤란, 관료의 독점적 업무 수행, 업무의 비용에 대해 의회가 정확한 정보 획득 곤란.
- ② **과잉생산**
  - 관료가 산출하는 업무량이 많을수록 관료는 의회로부터 많은 예산을 얻을 수 있으므로, 이를 위해 공공재의 산출량을 생산 가능한 최대수준까지 생산하게 되어 사회적 최적수준보다 과다한 공공재를 산출하게 되는 낭비적 결과가 발생(관료적 최적수준이 정치적 최적수준보다 높음). 관료들의 예산극대화 노력이 불필요한 조직이나 정책 등의 유지나 확대를 가져오기 때문에 행정의 비효율성을 낳게 되고, 이로 인해 정부실패 발생.

☞ **던리비(P. Dunleavy)의 관청형성론**

1. W. A. Niskanen의 예산극대화모형에 대한 비판 : 관료들이 공적 결정시 사적 이익을 극대화한다는 가정은 수용하나, 관료가 자기 부처의 예산을 극대화한다는 데에는 문제가 있다고 비판. 모든 기관, 모든 관료가 모든 예산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 종류(핵심예산, 관청예산 등), 관료 위치(고위직, 하위직)에 따라 다양한 이기적 행태가 나타난다고 주장. **합리적인 고위관료들이 예산극대화 추구동기를 별로 갖지 않는 이유로 ① 관료제 내에 집합행동의 문제(collective action problems)가 존재하며, ② 예산증가와 관련된 관료의 효용정도가 예산의 구성과 기관의 유형에 따라 다르며, ③ 고위직 관료들은 금전적인 효용보다도 업무와 관련된 효용을 더 추구한다는 점을 제시.**

2. 예산유형에 따른 예산극대화 전략

예산유형	조직유형	예산극대화동기
핵심예산 : 기관 자체의 운영비	서비스 전달기관(고전적 계선관료제), 봉사기관, 조세기관, 규제기관, 거래기관	예산극대화 동기를 갖게 됨
관청예산 : 핵심예산 + 해당기관이 민간부문에 지불하는 지출액	이전기관·계약기관(예산 상당부문을 사적 부문에 건네주는 기관)	예산극대화 동기를 갖기도 하고 갖지 않을 수도 있음
사업예산 : 관청예산 + 해당기관이 다른 공공기관에 이전하는 지출액	통제기관(국가조직의 자금사용 및 정책집행 방식을 감독하는 기관)	예산극대화의 동기를 찾기 곤란
초사업예산 : 사업예산 +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타 기관 예산		

(1) 관료들의 예산극대화 전략

- ① 중·하위 관료 : 핵심예산(부처 운영비)의 증대에 집중 - 직업안정성 개선, 경력축적기회 확대, 승진촉진 등의 이유
- ② 고위관료 : 관청예산의 증대에 집중 - 부서의 위신상승, 고객과의 관계 개선, 비상시 사용할 여유자원 창출 등의 이유  
고위관료는 예산 극대화를 할 수 있는 힘은 있으나, 예산 극대화를 위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크고 예산 극대화를 통해 얻게 되는 효용은 작으므로 예산극대화에 적극적이지 않으며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시키는 다른 방법을 찾게 되는데, 그것이 관청형성전략임.

예산극대화의 힘(확률) / 예산극대화를 위한 비용	하위 관료 < 중위 관료 < 고위 관료
예산극대화의 효용	하위 관료 > 중위 관료 > 고위 관료

- (2) 기관별 예산극대화 전략 : 핵심예산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전달기관은 예산극대화를 추구하나, 다른 공공기관에 이전하는 지출액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통제기관은 예산극대화의 동기를 찾기 힘들다. 계약기관·이전기관의 경우 반대급부를 제공할 수 있을 만큼 잘 조직화된 대규모 고객(예) 대기업, 주요 이익단체)을 다루는 기관의 고위관료들은 관청예산을 극대화할 동기를 갖게 된다. 그러나 다수의 분절화된 고객(예) 아주 경쟁적인 시장에서의 소기업들, 국가복지 수혜자들)을 취급하는 기관의 경우 예산 극대화 필요성을 별로 느끼지 못한다.

3. 고위관료의 관청형성전략

- (1) 관청형성전략의 채택 : 고위관료는 금전적 편익보다 수행하는 업무의 성격과 업무환경에서 오는 효용 증진에 더 관심. 합리적인 고위관료들은 그들의 부서를 참모기능에 근접하게 하는 전략을 채택. 소규모의 엘리트 중심적이고 정치권력의 중심에 접근해 있는 동료적 성격을 지닌 부서에서 참모기능을 수행하기를 원하는데, 먼저 개인수준에서 이것을 추구하다가 한계에 부딪히면 집합적인 전략을 모색.
- (2) 관청형성전략의 채택요인 - 관료의 이기적 행위
  - ① 고위관료들은 반복적 일상적이며 자율성이 낮고 시민의 눈에 잘 노출되어 있는 계선기능보다는 창의성을 요하고 자율성이 높으며 시민의 눈에 잘 띄지 않는 참모기능을 더 선호.
  - ② 고위관료들은 대규모의 계층제적이고 강제를 수반하며 갈등적인 인간관계를 기반으로 하는 업무환경보다는 소규모의 엘리트 위주로 구성되고 협동적인 업무패턴을 기반으로 하는 업무환경을 선호. 정치인이나 상류사회 인사와의 접촉이 거의 없는 변방에 위치해있는 것보다는 그런 기회가 많은 중앙에 위치해 있는 것을 더 선호.
  - ③ 하위관료들의 예산극대화의 편익은 크지만 예산극대화를 위한 수단이 없어서 예산극대화 노력을 하지 못함.

4. 관청형성전략의 수단

- ① 내부 재조직화를 통해 정책결정수준을 강화하는 반면, 일상적인 기능은 분리하고 고위관료는 가능한 한 개입하지 않음.
- ② 내부 업무실행의 변화를 통해 보다 세련된 관리 및 정책분석 체계로 기관의 형태를 변화시키고, 인원구성도 전문적인 참모(參謀)형으로 변화시키며, 자동화·전산화로 단순 사무업무를 축소.
- ③ 외부파트너(하부공공기관, 계약업자, 피규제인, 고객, 이익집단 등)와의 관계 재정의를 통해 일상적인 업무부담을 줄이고 정책통제는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전환.
- ④ 여타 부서와의 업무영역 경쟁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골치 아픈 업무 또는 단순한 업무를 다른 부서에 이관.
- ⑤ 민영화·분봉(hiving-off)·계약(contracting-out) 등을 통해 고위관료의 선호에 맞지 않는 기능에 대한 책임을 지방정부나 준정부조직, 책임운영기관에게 넘김.

18 실험설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20 국가7급

- ① 특정 정책의 효과성 판단을 위한 인과관계 입증에 활용될 수있다.
- ② 진실험(true experiment)과 준실험(quasi-experiment)의 차이는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무작위배정에 의한 동질성 확보 여부이다.
- ③ 회귀-불연속 설계나 단절적 시계열 설계는 과거지향적(retrospective)인 성격을 갖는 진실험설계(true experiment)에 해당된다.
- ④ 짝짓기(matching)를 통하여 제3의 요인에 관하여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을 동등화시킬 수 있다.

해설

- ③ (×) 진실형설계 ⇨ 준실험설계  
진실험은 연구자가 사전에 계획하여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을 무작위적으로 배정할 수 있기 때문에 미래지향적 성격이 강한 반면, 준실험은 연구자가 과거에 발생한 실험처리의 효과를 추정하기 위한 연구가 많기 때문에 과거지향적인 경우가 많다. 회귀-불연속 설계나 단절적 시계열 설계는 준실험설계의 방법이다.
- ④ (○) 준실험은 무작위배정을 통해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동등화를 피하기 어려울 때 사용된다. 즉, 무작위배정 방법 대신 다른 방법을 통하여 실험집단과 유사한 비교집단을 구성하려고 노력하는 실험설계이다. 준실험에서 사용하는 동등화 방법으로서 짝짓기(matching)란 유사한 것 끼리 묶어 하나는 통제집단에 다른 하나는 실험 집단에 배정하는 방식으로, 무작위배정에 비해 두 집단간 동질성이 떨어진다.

답 ③

19 다중합리성 예산모형(multiple rationalities model of budgeting)의 근간이 되는 두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20 국가직

- ① 루빈(Rubin)의 실시간 예산운영(real-time budgeting) 모형은 세입, 세출, 균형, 집행, 과정 등과 관련한 의사결정 흐름개념을 활용하고 있다.
- ② 킹턴(Kingdon)의 의제설정 모형은 정책과정의 복잡하고 불확실한 역동성을 부각시킨다는 점에서 다중합리성 모형의 중요한 모태라고 할 수 있다.
- ③ 루빈(Rubin)의 실시간 예산운영(real-time budgeting) 모형에서 다섯 가지의 의사결정 흐름은 느슨하게 연계된 상호의존성을 가지고 있다.
- ④ 루빈(Rubin)의 실시간 예산운영(real-time budgeting) 모형에서 예산균형 흐름에서의 의사결정은 기술적 성격이 강하며, 책임성(accountability)의 정치적 특징을 갖는다.

해설

④ (×) 루빈(Rubin)의 실시간 예산운영모형에서 기술적 성격이 강하고 책임성의 정치적 특징을 갖는 흐름은 **예산집행 흐름**이다.

루빈(I. Rubin)의 실시간 예산운영모형(real time budgeting : RTB)

성질이 다르지만, 서로 연결이 된 세입, 세출, 예산균형, 예산집행, 예산과정의 5가지 흐름이 통합되면서 초래되는 의사결정모형을 제시. 기본적으로 예산 정치에 관한 모형이며 예산 운영은 경제적 및 정치적 환경에 개방되어 있으며, 변화하는 외부 요인에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 실시간(real time)이란 한 결정의 흐름에서 이루어지는 결정이 다른 결정의 흐름으로부터 오는 정보와 결정에 적응하는 것을 의미한다.

의사결정 흐름	개념	정치	관심
세입 흐름	누가, 얼마만큼 부담할 것인가?	설득의 정치	세입원의 기술적 추계, 세입원의 제약 조건 변경 여부·방법 결정
세출 흐름	누구에게 배분할 것인가?	선택의 정치	기준예산의 기술적 추계, 예산획득을 위한 경쟁과 예산배분에 관한 의사결정
예산균형 흐름	예산균형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제약조건외의 정치	정부의 범위와 역할에 대한 결정
예산집행 흐름	계획된 대로 수행할 수 있는가?	책임성의 정치	집행의 수정 및 일탈의 허용 범위(기술적 성격 강함)
예산과정 흐름	누가, 어떻게 예산을 결정하는가?	누가 예산을 결정하는가의 정치	행정부와 입법부 간, 납세자인 시민과 예산 배분결정자인 정부관료 간 결정 권한의 균형

답 ④

[관련기출] 루빈(I. Rubin)의 '실시간 예산운영(Real Time Budgeting)'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16 지방7급

- ① 세입 흐름에서 의사결정-‘누가, 얼마만큼 부담할 것인가’에 관한 의사결정으로 의사결정의 흐름 속에는 설득의 정치가 내재해 있다.
- ② 세출 흐름에서 의사결정-‘누구에게 배분할 것인가’에 관한 의사결정으로서 선택의 정치로 특징 지어지며, 참여자들은 지출의 우선 순위가 재조정되기를 바라거나 현재의 우선순위를 고수하려고 노력한다.
- ③ 예산 균형 흐름에서 의사결정-‘예산 균형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에 관한 의사결정으로 제약조건외의 정치라는 성격을 지니며, 예산 균형의 결정은 근본적으로 정부의 범위 및 역할에 대한 결정과 연계되어 있다.
- ④ 예산 과정 흐름에서 의사결정-‘계획된 대로 수행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사결정으로 기술적 성격이 강하고 책임성의 정치라는 특성을 지니며, 예산계획에 따른 집행과 수정 및 일탈의 허용 범위에 대한 문제가 중요하다.

답 ④

20 부담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20 국가7급

- ① 특정의 공공서비스를 창출하거나 바람직한 행위를 유도하기 위해 사용된다.
- ② 수익자 부담의 원칙이 적용된다.
- ③ 지방세법 상 지방세 수입의 재원 중 하나이다.
- ④ 부담금에 관한 주요 정책과 그 운용방향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부담금심의위원회를 둔다.

해설

- ① (○) 부담금이란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행정권한을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법인의 장 등 법률에 따라 금전적 부담의 부과권을 부여받은 자(이하 "부과권자"라 한다)가 분담금, 부과금, 기여금, 그 밖의 명칭에도 불구하고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관계없이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조세 외의 금전지급의무(특정한 의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예치금 또는 보증금의 성격을 가진 것은 제외한다)를 말한다 즉, 특정한 공익사업에 특별한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에게 그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키기 위하여 부과하는 법적 의무다. 부담금은 1961년 최초로 도입된 이후, 원인자·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공공서비스를 창출하거나 바람직한 행위를 유도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2002년부터는 「부담금관리 기본법」이 제정·시행되고 있다.
- ② (○) 수익자부담, 원인자부담 원칙이 적용된다.

수익자부담금	공공사업 또는 시설로 인해 특별한 이익을 받은 자에게 징수하는 부담금 예) 지방자치법 138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공공시설의 수익자 분담금, 개발부담금
원인자·사용자부담금	각종 시설의 건설 또는 유지 등을 위하여 그 사용자 또는 원인자에게서 관련 비용을 징수하는 부담금 예) 교통유발부담금, 환경개선부담금
유도성 부담금	직접적인 규제 수단이 아닌 금전에 의한 간접적인 규제 수단에 의하여 일정한 국가목적을 유도하기 위한 부담금 예) 배출부과금

- ③ (×) 부담금은 지방세가 아니며, 지방세입 분류 중 세외수입에 해당된다.  
cf) 국고보조금인 부담금(세외수입 아님) : 지방자치단체의 단체위임사무의 경우 이해관계 범위 내에서 국가가 전부나 일부를 부담하는 국고보조금의 유형으로 의존재원에 해당. 지방재정법 제21조 ①항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기관이 법령에 의하여 처리해야 할 사무로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 그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국가에서 부담하지 아니하면 아니 되는 경비는 국가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한다.'라고 규정.
- ④ (○) 「부담금관리기본법」 제9조(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 ① 부담금에 관한 주요정책과 그 운용방향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둔다.

답 ③